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h1>보도자료</h1>	2015. 12. 22(화) 작성 · 문의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 과장 김창수, 사무관 원영호·이정두 (Tel. 02-3703-2061~63)
 환경부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과장 김영우, 서기관 마수윤 (Tel. 044-201-7360, 7379)
 행정자치부			행자부 감사담당관실 과장 문금주, 사무관 임양기 (Tel. 02-2100-3190, 3139)
 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국토부 감사담당관실 과장 김태복, 사무관 임동선 (Tel. 044-201-3110, 3126)
 미래창조과학부			미래부 정보보호지원과 과장 박성진, 사무관 최윤구 (Tel. 02-2110-2920, 2921)
<p>22일(화) 14시(브리핑 시작) 이후 사용 행자부, 환경부, 국토부, 미래부 공동배포</p>			

공공 폐기물 처리 관련 구조적 비리 적발·제도개선 - 공인인증서 불법유출, 부당 설계변경 등으로 재정누수 초래 -

- 60개 기관의 사업 192개 현장 조사 결과, 모든 현장에서 기관 공인인증서 불법유출과 담당 공무원 확인 없이 처리예산 지급사실 적발
 - 기관별로 적발된 공무원·공공기관 직원 364명 중 36명과 관련 업체 30곳을 업무상 배임 등으로 수사의뢰하고, 그 외 328명은 부처 통보하여 징계 등 조치 예정
 - 나머지 사업은 부처별로 전수조사하여 구조적 비리를 발본색원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재발방지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
-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단장 : 오균 국무조정실 국무 1차장)은 폐기물처리 등 환경사업 비리를 **국민생활 밀접분야 주요비리**의 하나로 선정하여 부패근절 대책을 추진 중에 있다.
- 특히, 한국환경공단의 폐기물처리 종합정보시스템(Allbaro System) 등을 통하여 공공기관·지자체 등의 공공건설폐기물 처리예산* 집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 '12년부터 '15.6월 사이 총 384개 기관(부처·지자체 포함) 관련 예산 1조 7,037억원 집행

- 지난 '12년 이후 3년 6개월간 9만 7천여 곳의 공공공사 현장에서 공공기관 공인인증서가 불법 유출되어 담당 공무원 등이 예산 집행시 폐기물 물량·성상 등을 확인하지 않고 폐기물업체가 임의 작성하여 예산을 부정지급받은 사례 등을 적발하였다.
- 추진단은 비위의 구조적 성격과 재정누수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행자부, 국토부, 국방부, 교육부, 해수부, 산업부, 농림부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 60개 기관(정부부처 5곳, 공공기관 5곳, 지자체 50곳)의 사업현장 192곳을 선정하여 지난 9월부터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 그 결과, 조사를 실시한 모든 현장에서 기관명의 공인인증서가 불법 유출되어 폐기물업체가 불법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 과정에서 폐기물처리 확인 업무를 방치한 혐의 등으로 공무원·공공기관 직원 등 364명을 적발하였으며,
 - 이들 중 공인인증서 불법유출뿐 아니라 폐기물량 확인 등 기본적인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업체요구만으로 설계변경 및 예산증액까지 해주는 등 공공예산의 부당지출 혐의가 있는 담당 공무원 등 36명과 폐기물 처리비용 허위청구 등 혐의가 있는 폐기물 업체 25곳, 감리업체 5곳 등 30곳에 대해서는 수사의뢰하고,
 - 나머지 공무원·공공기관 직원 등 328명에 대하여는 소속부처·기관에 통보하여 사안의 경중을 조사토록 한 후 징계 등 조치를 취하도록 할 예정이다.
 - 아울러 앞으로 공공 폐기물 처리 관련 비리를 근본적 차원에서 예방하기 위해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중에 있다
 - * 담당 공무원 실명제, 폐기물 처리정보 임의조작 차단, 허위·미등록 운행 자동적출 시스템 도입 등
- 이번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현장에 대해서는 부처별로 전수조사하여, 관련 비리를 발본색원할 계획이다

조사 배경 및 경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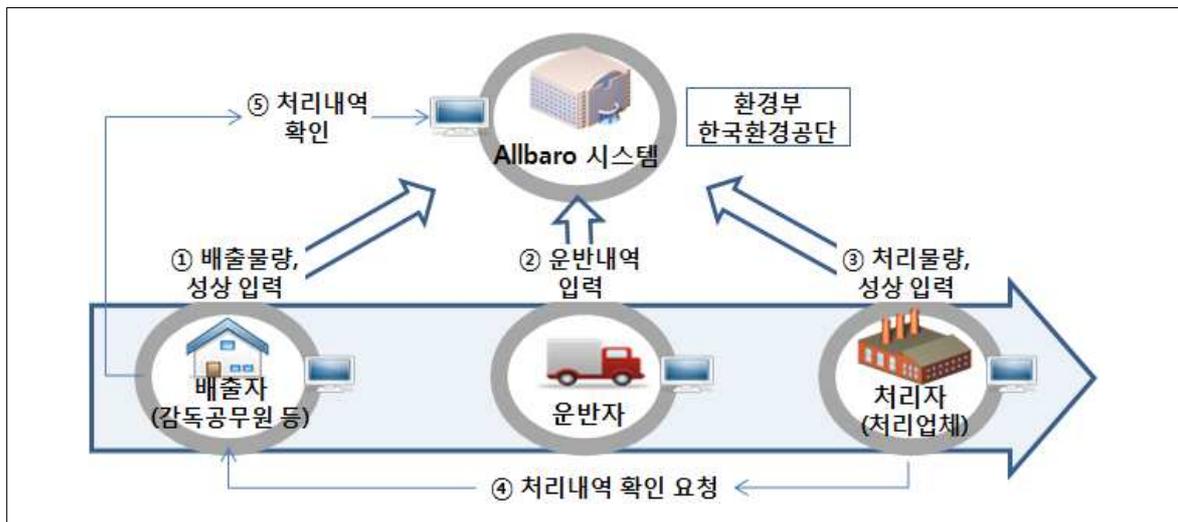
- (조사배경) 부패척결추진단이 공공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처리정보를 관리하는 한국환경공단의 **올바로**(Allbaro) 시스템 등을 통해 관련 예산 집행실태를 점검

☞ **[올바로시스템]**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2010년 이후 건설폐기물 처리시 작성되는 종이인계서를 전산입력하여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
 ⇒ 배출·운반·처리자의 편의와 업무투명성 제고 취지

- 지난 '12년 이후 금년 6월까지 97,755곳의 공공 공사현장에서 담당 공무원이 폐기물의 물량·성상 등을 확인하여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는데 사용되는 공인인증서가 폐기물업체에 불법 유출되어 관련 예산이 부정 지급된 혐의를 적발

불법사용 현장	불법사용 건수	처리 물량	처리비용(추산)
97,755곳	390만건	852만톤	1조 7,037억원

건설폐기물 배출·운반·처리 관리 개요



☞ 배출자, 운반자, 처리자가 각각 정보를 시스템에 입력하여 폐기물처리 전 과정을 추적·관리함으로써 비리 발생 소지를 차단하는 시스템이나,
 - 통상 운반까지 검하고 있는 처리업체에서 공공기관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배출정보까지 입력함으로써 시스템의 취지를 무력화

- (추진경과) 행자부, 국토부, 국방부, 교육부, 해수부, 산업부, 농림부 등 7개 부처 합동으로 실태조사 TF를 구성 (15.9.~11월, 전담팀 46명)
- 9월부터 관련 공사현장 97,755곳 중 폐기물 배출물량, 사업 규모 등을 고려하여 철도건설, 도청이전, 택지개발 등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192개 공사현장(총 60개 기관)을 우선 실태조사

정부부처	공공기관	지자체	처리예산
5개 기관 (15개 공사현장)	5개 기관 (39개 공사현장)	50개 지자체 (138개 공사현장)	총 1,549억원

실태조사 결과

- (개요) 실태조사를 실시한 전국 192개 모든 공사현장에서 공공기관 등의 공인인증서가 불법 유출되어 업체에 의해 임의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 담당 공무원·공공기관 직원 364명의 직무 방치, 부당 예산 집행 혐의가 확인되었고, 그 외 상당수 현장에서 부당한 추가 설계변경을 통한 예산 증액, 사업자 부당선정 등 구조적 비리 혐의가 드러남
- 구조적 비리실태
 - 담당 공무원 : 공인인증서를 폐기물업체에 유출하거나, 전임자가 유출한 공인인증서를 계속 사용토록 묵인
 - * 그 외에 규정을 위배한 부당 설계변경, 사업쪼개기 등 부당한 예산 누수 사례를 상당수 확인
 - 폐기물업체 : 담당 공무원이 확인·입력하여야 하는 배출물량·성상 등 확인 업무를 대신 처리하고 임의로 적성한 폐기물 배출인계서 등을 근거로 예산을 지급받음
 - 감리업체 : 일부 기관이 관련 법령에 위반하여 업무를 감리업체에 위임하고 감리업체는 확인업무를 방치하거나 부당 설계 변경 비리에 가담

□ 비리원인

- 2010년 이후 공공폐기물 처리를 수기에서 전자문서를 활용한 일괄 관리시스템으로 전환하였으나 담당 공무원 등의 인식과 업무행태가 이에 따르지 못하여 폐기물량 확인 등 기본적인 업무가 방치되는 결과를 초래
- 특히 공공기관의 관리 부실로 공인인증서가 업체에 불법 유출되어 임의 조작을 통한 예산 부정이 구조적으로 발생
- 관련 부처와 기관간 정보공유 및 모니터링 미비로 민관 유착의 빌미를 제공하고 예산 집행·감독의 사각지대로 방치됨

□ 주요 비리유형

○ 공인인증서 불법 유출(공통)

- (불법유출) 담당 공무원 등이 기관명의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폐기물 처리업체에 이메일 등으로 송부

▶ OO구청 000은 폐기물처리용역 공사감독을 수행하면서 폐기물업체(OO 환경)가 배출인계서 작성 등의 업무를 대신 해주겠다고 하자 구청 명의의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를 이메일로 송부(전자서명법 위반)

- (불법사용 목인) 일부 업체가 기존 사업과 관련하여 획득한 기관명의 공인인증서를 계속해서 신규 사업 등에 사용하였음에도 담당 공무원이 이를 목인

▶ OO부 'OO 처리용역 사업'의 경우 폐기물업체(OO산업)가 다른 사업 수행 과정에서 확보한 OOOO본부 공인인증서를 계속 사용하여 공사관리관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였음에도 이를 방치

○ 직무유기(공통)

- (배출자 확인의무 등 직무유기) 폐기물 처리업자로 하여금 폐기물의 성상(성질·상태), 배출물량 등 배출관련 정보를 임의 입력케 하는 등 폐기물 처리 직무 유기

▶ OO청의 OO하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감독업무를 수행한 OOO 등 6명은 배출감독 업무를 이행하지 않고 폐기물업체에서 성상·물량·차량 등 일체의 관련 정보를 입력·처리

- (감리업체에 직무 전가) 건설폐기물법상 위탁할 수 없는 배출 감독업무를 감리업체에게 임의 위탁한 후 그 직무수행 여부를 감독하지 않음 (OOO공사, OO공단 등)

▶ OO공사는 SOC(사회기반시설)공사와 관련하여 폐기물 배출자의 확인 업무를 감리업체에 위임하고, 감리업체는 폐기물업체에 배출물량 등의 시스템 입력 등을 수행토록 요구

○ 예산집행 비위

- (부당 설계변경) 업체의 처리물량 등 설계변경 요구를 아무런 확인 없이 수용하여 폐기물 처리예산을 부정 증액 집행 (OO공단 등)

▶ OO공사 OOO 등 6명은 OO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건설 폐재류 물량이 아닌 매립비율은 설계변경 사항이 아님에도 그 비율을 2%에서 10.5%로 임의 변경하여 9억원의 재정손실 초래

- (적재가능 물량 미확인) 운반차량의 적재한도를 현저히 초과한 물량을 운반한 것으로 과다청구 하였음에도 그대로 처리비용을 지급

▶ OO시 OO 재해예방사업 공사와 관련하여 25톤 운반차량에 38톤을 운반하였다는 등 차량 1대당 적재물량이 '12년 87건 평균 30톤, '13년 88건 평균 32톤으로 과다청구 의혹이 농후함에도 업체 요구대로 정산

- (청구비용 적정성 미확인) 증빙자료로 동일 사진을 중복 사용하거나, 공인 인계서가 아닌 임의 양식을 사용한 업체에 아무런 확인 없이 지급하였고 중량 등 배출물량이 기재되지 않은 송장 첨부를 그대로 수용 (OO도 등)

- (운행횟수 부풀리기·허위서류 첨부) 폐기물의 상차·운반·하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시 동일차량의 1일 운행이 불가능한 횟수로 부풀려진 내용을 올바로시스템에 입력

▶ 00시 폐기물업체(00환경)는 동일차량이 하루 동안 강릉·정선 지역을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총 36회 운행한 것으로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였으며, 정산시에는 위조된 허위 인계서를 근거로 처리비용을 지급받음

○ 그 외 비위유형

- (사업 임의 분할 후 부당 발주) 법령상 임의 분할이 금지된 사업(7.3억원)을 18건(건별 5천만원 이하)으로 임의분할 후 발주하여 지역업체에 특혜 부여 (00시)
- (별도 사업을 설계변경으로 처리) 별도 사업을 신규발주하지 않고 기존사업을 설계변경하는 편법으로 기존 업체에 특혜 제공 (000청 등)

부패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① 담당 공무원 실명제 도입

— < 실태 및 현황 > —

- ▶ 기관별로 발급된 1개 공인인증서를 다수의 공무원이 복사하여 사용하면서 담당 공무원 등이 기관명의 공인인증서를 폐기물 업체 등에 이메일로 송부
- ▶ 동일한 인증서가 불법유출된 후 다수의 사업과 업체들에 유통됨에 따라 전자인계서가 작성된 경우에도 실제 작성자 확인이 곤란

< 개선방안 >

- (공인인증서 관리 강화) 담당자별로 복사가 불가능한 공인인증서를 개별 지급하고 발급 및 사용내역을 엄정 관리·점검
- (인계서 작성 실명제 도입) 비위사태 발생시 당해 공인인증서 사용자를 즉시 추적하는 시스템 운용

② 건설폐기물 처리정보의 임의조작 차단

< 실태 및 현황 >

- ▶ 처리업체 내에는 계근대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으나 막상 배출현장 대부분에는 설치부담(3~5천만원)으로 인해 계근대 미설치, 처리업체가 수동입력
- ▶ 담당자 1명이 다수의 공사현장을 확인해야 하는 업무부담으로 모든 배출현장에서의 확인업무 수행 곤란
- ▶ 대형 공사 대부분이 법령에 위반하여 폐기물량 등 확인업무를 공사 감리업체에 위탁하였으나, 감리업체도 관련업무를 방치

< 개선방안 >

- (처리업체 계근값 자동전송) 처리업체에서 측정한 계근값이 환경공단의 올바로시스템에 자동전송되도록 하여 허위입력을 원천 차단
- (처리업체 소프트웨어 감시 강화) 시스템을 개선하여 동일 IP의 배출·처리 인계서 작성을 차단하고 계근시스템 조작여부의 주기적 확인 등 감시 강화
- (배출확인자 범위 확대) 현장에 상주하는 책임 감리업체 등에 배출 확인업무 위임을 허용하고, 공무원에 준하여 관리책임 강화

③ 건설폐기물 처리 예산 집행의 투명성 확보

< 실태 및 현황 >

- ▶ 일부 지자체는 동일한 사진이 중복으로 첨부되거나 폐기물 성상·물량 등 확인이 불가능한 차량 정면 사진만을 증빙자료로 하여 비용 지급
- ▶ 지자체에 등록된 건설폐기물 차량정보와 올바로시스템상의 등재정보 불일치 등으로 허위·미등록 운행여부의 확인이 불가하여 규제허점이 발생

< 개선방안 >

- (증빙자료 표준화) 폐기물 배출시 배출 일시·장소·성상·적재량 확인이 가능한 사진 또는 동영상 촬영을 의무화
- (허위·미등록 운행 적출시스템 도입) 지자체 시스템과 올바로시스템을 연계하여 차량정보에 관한 지자체 정보를 활용, 허위·미등록운행 등을 자동 적출

④ 처벌강화 및 교육시스템 개선 등

< 실태 및 현황 >

- ▶ 광범위하게 반복되어 온 비정상적 관행으로 인해 법령 위반 및 예산집행 부정에 관련 공무원 등의 인식 부족
- ▶ '10년 전자인계서 의무화 이후에도 관련 정책의 사후관리 및 담당자 교육 미비로 비위행태 지속

< 개선방안 >

- (유사사례 재발시 엄정 조치) 관련 비위 재발시 공무원 등은 형법, 전자서명법 등에 따라 수사의뢰 등 엄정조치하고 폐기물 업체 비리는 수사의뢰·허가취소 등 제재 강화
- (담당자 교육 강화) 환경직 위주로 진행된 올바른시스템 교육을 건축·토목 등 실제 처리담당자 위주로 시행토록 개선

향후 조치

- 미래부, 환경부, 한국환경공단은 총 384개 기관의 불법 유출된 공인인증서를 전부 폐기하고 재발급 절차를 밟도록 조치
- 조사결과 위법행위가 적발된 공무원·공공기관 직원 등 364명중
 - 공공예산을 부당하게 지출한 혐의가 있는 담당 공무원 등 36명과 폐기물 처리비용 허위청구 등 혐의가 있는 폐기물업체 25곳, 감리업체 5곳 등 30곳에 대해서는 수사의뢰하고,
 - 나머지 공무원·공공기관 직원 등 328명에 대하여는 소속부처·기관에 통보하여 사안의 경중을 조사 후 징계 등 조치 예정
 - * 부당 설계변경 등으로 허위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소관 기관별로 환수조치를 취하도록 할 예정
- 이번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현장(97,563곳)은 부처별 전수조사를 통해 관련 비리를 발본색원하고,
 - 향후 유사사례 재발시에는 형법, 전자서명법 등에 따라 수사의뢰 등 엄정조치할 것임